

■ (농정 이슈) 2021.9.17. “한국농어민신문” 보도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자체 이전 본격화

- ‘2022년도 예산안’서 빠지고
- 행안부 교부금 형태 배정도, 3~5년 뒤 지자체로 완전 내려

농축산단체와 유기질비료업계의 강력한 국가사업 존치 요청에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본격화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편성한 내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이 정부가 국회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 빠졌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은 1130억원. 농식품부는 당초 내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산도 올해와 동일한 1130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접수한 ‘농식품부소관 예산안’에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예산안에서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항목 자체가 사라졌다. 본보 확인 결과, 농업계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 전달에도 정부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자체 이관을 실질적으로 확정하면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 관련 사업 예산에 묶여 행정안전부로 넘어갔다.

문제는 재정분권 업무를 수행하는 행안부로 내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 편성이 넘어간 지금까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 축소나 포기, 유기질비료 수급불균형에 따른 축산분뇨 대란 우려 등에 대한 대응책은 어느 하나 나온 게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에는 국가사업을 지자체에 이관하더라도 3년 동안은 행안부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지자체에 교부금 형태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후 사업 권한이 지자체에 완전하게 넘어가는 시점부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이 행안부에서 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내려가는 동안은 사업이 기존 방식 그대로 운영되지만, 사업 권한이 지자체로 완전하게 넘어간 다음부터 중앙부처에서 간섭할 수 없게 된다”며 “지자체로 완전하게 권한이 넘어간 이후에도 지자체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국가 보조 사업 예산 편성 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실적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3년, 최대 5년 후를 예측할 수 없는 농업계는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면 다행이지만 농업계 우려대로 복지예산 수요 증가 등으로 지자체 재정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시군단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일부 지역에서는 도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수혜 대상인 농가 입장에서선 그야말로 잘 해야 본전인 셈이다.

< 우정수 기자 >